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군사 및 핵외교' 전략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09년 1월 출범할 미국 오바마 행정부하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와의 '핵게임'에 대비, 11월 12일 시료채취문제를 북핵폐기 3단계 의제로 설정하였다. 우선 북한의 대미 전략·전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 북한은 체제보존을 위해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대내·외적 체제위협을 군사력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통치방식이다.

북한은 “군사가 선차고 모든 것을 군사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인민군대와 국방공업에 요구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선군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선 군사력 건설, 후 경제건설(선군후경)' 정책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은 '선군시대 외교'를 “선군시대는 그에 맞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는 외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힘의 외교' 명분에 기초하여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개발을 합리화하고, 핵 및 미사일을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 억제력' 보유를 통한 '선군외교' 실현을 위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천에 옮겼다. 북한은 핵실험을 “정확한 전략전술과 탁월한 영도예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헤치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김정일 지도력의 결과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개인숭배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선군정치로 강화된 군사역량(특히 핵무장)을 지렛대로 대미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관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핵 억제력'을 지렛대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고, 미국과의 안보대화(군사대화)채널을 유도하여 '종전선언→북미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주한미군 기능과 역할 변화 또는 철수'로 연결하는 외교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 전략은 미국과의 양자(북·미 회담) 또는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6자회담) 핵협상 전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의 6자회담과 실무그룹회의에 대비하여 유엔대표부의 비공식라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북핵문제 해법과 그들의 '점진적 핵 해법'을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해 막후교섭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은 6자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을 북·미간 군사대화화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2006년 7월 1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

부 대표담화를 통해 ‘조·미 군부사이의 회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단순한 북미간 군사회담이 아닌 ‘북미 핵군축회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위협 및 핵위협 제거가 급선무인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핵위협 포기 선언 및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 실시를 주장하고 북·미 군사 실무접촉이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해나갈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수 및 남한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등과 관련지으며 북·미 직접협상을 추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군축회담’ 주장은 우선 그들이 ‘핵무장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핵개발이 불법이 아닌 당당한 권리라는 전제하에, 북핵 논의는 수평적 핵확산(핵국가 확산)문제에서 수직적 핵확산(핵무기수 또는 궁극적인 비핵화)문제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 서둘러 핵실험을 하고 ‘핵국가’임을 선언하게 된 것은 ‘핵국가’ 입장에서 대등하게 ‘핵군축’을 논의하려는 공세적 의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남한의 핵능력’을 한축으로 하고,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다른 축으로 하는 대등한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핵군축)와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이) 담보를 포함하는 형태의 핵협상(6자회담)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전략은 이러한 협상 틀 내에서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핵무기 및 병력 감축,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에서 북한 제외, 기존의 보상내용 확장 등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장으로 이를 제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수세적 상황을 공세적 상황으로 반전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IAEA와 NPT 참가국가로서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국제적 압력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의 ‘핵국가’가 된 북한은 핵국가들간 대등한 차원의 핵군축 논의(예: 미·소간 핵군축)로 변화시켜 일방적인 핵포기를 주장하는 국제적 압력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향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때문에 고육책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대외적 선전선동을 강화하여 미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대북 압박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비확산 요구는 불평등한 것으로서 강대국들의 기득권 수호차원의 부정적인 것임을 강조하여 비핵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여론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미국의 태도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여하에 따라 북한의 전략·전술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군축회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핵군축 회담 요구 수용은 곧 북한의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미 양자간 군사대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미 군사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는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군축회담’ 등 비현실적인 요구로 일관되게 나올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선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미 '선군외교'가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핵카드'를 지나치게 과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시기인 1994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 '폭격'까지 구상한 바가 있었다.

